



충장축제 금남로 퍼레이드 제14회 추억의 충장축제'를 찾은 시민들이 지난 21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진행된 거리 퍼레이드를 즐기고 있다. 지난 18일 개막한 충장 축제는 금남로·충장로 일대에서 공연과 체험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22일 폐막했다. /최혜배기자 choi@kwangju.co.kr

물고 물리는 통합·연대...여야 섹셈 고심

뉴스 초점

국감후 정계개편 시나리오

정치권이 국감감사 외에도 정계개편 논의로 요동치고 있다.

22일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는 물밑에서만 정계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달 말 국감감사가 끝나면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4면>

특히 호남에 지역적 기반을 두고 있는 국민의당이 통합·연대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어 연말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은 정계개편 논의로 시끄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가장 논의가 많이 진행된 시나리오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과 의원들이 결합하는 '보수진영 부분 통합'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중도개혁을 표방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강파 간의 통합 모델이 정치권 이슈로 급부상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연대 또는 연정도 여전히 거론되는 시나리오 중 하나다.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측이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최근 급부상한 시나리오다. 두 당의 협력모델로는 통합·정책연대·선거연대 등 세 가지가 있다. 이중 통합은 안 대표 측이 통합

안대표, 호남중진들 반발 속

바른정당과 통합 적극 추진

바른정당 일부, 한국당행 모색

민주·국민의당 연대 가능성도

시너지효과가 가장 크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진하고 있다. 바른정당 측에서도 부정적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두 정당의 지역적·이념적 기반이 다르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바른정당 내 대표적 자강파인 유승민 의원은 이에 대해 '개혁보수 원칙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과 정당을 같이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통합에 부정적인 발언이지만 국민의당과 통합에 긍정적 발언도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국민의당 호남 중진들이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 광주·전남의 지역정치권에서도 부정적 시각이 우세한 편이어서 국민의당 내부에서 합의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안 대표가 바른정당과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당이 깨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따라서 양당이 우선은 정책연대 수준으로 점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칠 것이란

시각도 있다. 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연대를 이루자는 주장도 있다. 수도권 등 약세지역에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국민의당 연대=민주당은 여야정협의체나 개혁입법연대를 통해 국민의당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국회에서 각종 개혁 과제를 처리하려면 국민의당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내에서도 호남지역 중진들을 중심으로 협업체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협력 체제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방선거 때는 호남 표심을 놓고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장관 자리 일부를 국민의당에 주고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연정'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힘을 받지는 못하는 데다 더욱이 안 대표가 여론에 대립하는 노선을 견지하고 있어 연대와 협력의 여지는 더 줄어들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호남지역민 사이에선 국민의당이 여론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안별로 견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많은 편이어서 국민의당 지도부의 선택이 주목된다.

◇보수진영 부분 통합=바른정당 10명 이내 의원들이 탈당 후 한국당에 합류하는 시나리오다. 통합에 찬성하는 의원들

은 이미 수차례 모임을 통해 11월13일 바른정당 전당대회 이전에 합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특히 한국당이 지난 20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를 의결해 통합 전제조건도 어느 정도 충족했다.

문제는 바른정당 내 자강파 의원들의 강력한 통합 반대다. 또 한국당 친박계 의원들이 윤리위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대전지검 서산지청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 영덕·진주·충주·서산지청장
-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 제2부정검사
- 예금보험공사 법률지원팀
- FIU(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실장
- 경기도 법률지원팀
- 특수·금융 수사 전담
- 18년 오월이 가는 길 지음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시인 위재천 올림

■ 서울·서초구 서초대로 741 4층(성남역 서초타워 15, 17, 18층)
■ 대표: 2046-1300 ■ 직통: 2046-0681 ■ 팩스: 3482-1177

文대통령 “신고리 5·6호기 건설 조속 재개”

공론화위 권고 수용...“탈원전도 차질 없이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6호기 해자화위위원회 건설 재개 권고와 관련, 입장 발표문을 통해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며 “공사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응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편으로 정부가 이미 전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며 “전국 각지에서 80대 고령 어르신부터 20대 청년까지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합숙 토론을 포함해 33일 동안의 속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지혜롭고 현명한 답을 찾아주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와 관련해서는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탈원전 및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운데 원전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0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 대한 공론조사 결과, 건설 재개 쪽을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 보다 19%포인트 더 높아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5·18 진상규명은 의무...최대한 협조

공수처 규모 줄어도 수사 충분히 감당”

박상기 법무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은 의무”라며 법무부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 조비오신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숙이 필요하다”며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빨리 끝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으며,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규모가 축소된 데 대해서는 “기능이 줄어든 것은 아니며, 충분히 수사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턴뷰 3면

지난 20일 광양 광영고등학교에서 열린 ‘법사랑 타운’ 준공식에 참석한 박 장관은 5·18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광주는 세계적인 민주화 성지”라며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법무부가 최대한 지원하고 협조하겠다. 그게 의무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광주지검이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이 자숙할 필요가 있는데 계속해서 자기 변명하는 일이 참 안타깝다. (소환은) 일단 광주지검이 수사하고 있으니 향후 진행상황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적폐청산의 대상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적폐청산의 목표가 있을 수는 없지만, 빨리 끝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최근 법무부에서 규모가 축소된 공수처에 대해서는 “일단 올해 법안 통과가 목표요, 이를 위해 최대한 합리적인 규모로 추산한 것”이라며 “검사 숫자가 줄었다고 기능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전라남도

자녀가 피우는 우리집 행복꽃

아이들의 웃음소리, 축복받은 전남의 미래!

- 신생아 양육비 지원**
 - ▶ 신생아 출생시 태아당 30만원 지급
 - ※ 시군별 출산장려금 별도 지급
- 다자녀 행복카드제**
 - ▶ 막내가 만13세 이하(태아 포함)인 두자녀 이상을 둔 가정
 - 발급처: 농협중앙회, 단원농협에서 발급
 - 혜택: 연회비 면제(첫해 5천원), 백화점 등 BC가맹점 무이자 할부
 - 영화관, 학원업종, 서점, 놀이 마트·주유소, 놀이공원 등 할인
- 고위험 임신부 및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 ▶ 중위소득 180% 이하의 고위험 임신부 3대 질환* 의료비 지원(3백만원 한도 내)
 - *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 ▶ 만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120만원)
- 공공산후 조리원 운영**
 - ▶ 공공산후조리원(해남종합병원 내) 운영
 - 이용료(2주): 일반인 1,540,000원, 감염자* 462,000원
 -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생애비 이상, 다문화, 장애인, 국가유공자, 미혼모, 북한이탈, 5.18 유공자, 귀농·귀촌인
 - ※ '18년 상반기 중 증진의료원, 완도대성병원도 개원 예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
 - 산후조리, 신생아 돌봄, 가사활동 지원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기간별 이용료 차등 지원
-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수술 및 의료비 지원(최대 15백만원)
 -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지원(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약제·의료비)